

◆ [Focus]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 [What's News]

- (무역규제) 미 무역대표부(USTR), 2023 무역장벽보고서(NTE) 공개
- (강제노동) 상원, 자동차 공급망 內 위구르 강제노동 조사 확대
- (반도체) TSMC, 대미 투자 최대 걸림돌은 이중과세
- (전기차) 바이든 정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발표
- (IPEF) 피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연내 협상 마무리 전망
- (의회동향) 하원, 해양 운송 개혁 이행법(OSRIA) 발의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IRA)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1. 개요 및 배경

□ 美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V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3.31)

- 재무부는 작년 12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방향을 예고한 바 있으며, 오늘 그 세부 시행 규정 및 요건이 포함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문(Notice for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
- 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 달러*를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
 - *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 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 달러 지급
- 이번 지침에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용어 정의 △공정별 가치산정 방식 등에 관한 정보 상세 제공
- 4월 17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게시 후 시행되며 보조금 대상 적격 차량 목록 역시 4월 18일 업데이트 후 매월 갱신 예정
 - * 관련 논평 기간은 6월 16일 까지 진행, 이후 추가 수정 및 변경 가능성 존재(폴리티코, 3.31)

2. 주요 내용

(1) 핵심 광물 요건

- 전기차 보조금 3,750 달러 수혜를 위해,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 가치의 최소 40% 이상('23년 기준)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extract) 또는 처리(process)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recycle)되어야 한다고 규정

- 원산지 요건은 '24년 50%, '26년 60%, '26년 70%, '27년 80%로 인상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영토로 한정

○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3단계 절차 제시

- (1) 제조사는 핵심 광물 조달 체인을 채굴, 처리, 재활용에 따라 분류
- (2) 핵심 광물 전체 공급망(채굴·처리)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발생하거나, 재활용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자격 있는 핵심 광물'(qualified critical minerals)로 간주 ('23~24년 동안)

* 최소 부가가치 50% 기준은 재무부 검토 결과에 따라 '25년 이후 엄격화 예고

- (3) 배터리에 함유된 핵심 광물 가치 중에 '자격 있는 핵심 광물'의 가치 비중이 최소 40%('23년 기준)가 되는지 판단

○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를 핵심 광물 범주로 분류

- 구성 재료의 정의를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내포한 재료'라고 규정하고, 이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대상으로 명시
- 배터리 셀 제작에 사용되는 음극재 활성용 분말, 양극재 활성용 분말, 호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 염 및 전해질 첨가제 등 (powders of cathode active materials, powders of anode active materials, foils, metals for solid electrodes, binders, electrolyte salts, and electrolyte additives)

(2) 배터리 부품 요건

-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전체 가치 중 50% 이상('23년)이 북미지역 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 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 요건은 '24~25년 60%, '27년 80%, '28년 90%, '29년부터 100%로 인상
- 배터리 부품 원산지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3단계 절차 제시
 - (1) 배터리 부품의 거의 모든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이 북미지역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 해당 조건 충족 시 '북미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
 - (2) 개별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incremental value)를 산정
 - * 증분 가치는 해당 배터리 부품의 전체 가치에서 배터리 부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를 뺀 값을 의미
 - (3) 개별 부품의 증분 가치를 합해 전체 배터리 부품 가치 책정
 - * 또는 개별 배터리 모듈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배터리 가치 책정 가능
 - (4) 북미 배터리 부품 증분 가치의 합을 전체 증분 가치로 나눔으로써 북미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가치 비중을 계산
-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공업, 화학, 물리적 공정을 거친 하나 또는 다수의 부품 및 구성 재료를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으로 함.
 - 배터리 부품에 음극 전극, 양극 전극, 고체 금속 전극, 분리막,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을 포함
(cathode electrode, anode electrode, solid metal electrode, separator, liquid electrolyte, solid state electrolyte, battery cell, battery module)
 -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시

(3) 기타 특이사항

- 우려 대상 외국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에 관한 정의
 - 美 국무장관에 의해 외국 테러리스트조직으로 지정되거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관리하는 제재 대상국 국민 및 개인 등 우려 대상 외국 법인의 정의에 해당할 시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 * 해당 정의는 인프라법의 (42 U.S.C. 18741(a)(5)) 정의 차용([링크](#))

-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운행되는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해당 핵심 광물이 우려 대상 외국 법인에 의해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운행되는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부품 중 하나라도 우려 대상 외국 법인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협정 체결국**

- 미국과 FTA 및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명시

: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 요르단, 한국 ,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 21개 국

- 일본의 경우, 미국과 정식 FTA 체결국은 아니나 최근 미국과 별도의 광물 무역협정을 통해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세액공제 관련 4개 특별 지침(special rules) 수록**

- (1) 차량등록번호(VIN) 하나당 세액공제 혜택 1회만 적용 가능
- (2) 세금 환급 신청 시 납세자는 VIN 의무 보고 필요
- (3) 고소득자에 혜택 제외
 * 부부 합산 30만 달러, 가장 22.5만 달러, 개인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간 소득
- (4) 기준 권장소비자가격(MSRP) 초과 차량은 혜택 제외
 * 밴: 8만 달러, SUV: 8만 달러, 픽업트럭: 8만 달러, 기타 차량: 5.5만 달러

○ **EV 세액공제 적격 차량 목록 갱신 예정**

- 제조업체별 적격 자동차 목록은 해당 링크(FuelEconomy.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행일인 2023년 4월 18일까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
- 2023년 4월 18일 또는 그 이후에 운행(인도)된 차량은 이 보조금을 받기위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건 충족 필요
- 해당 요건은 2023년 4월 18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2년 8월 16일 또는 그 이전에 구매한 경우는 제외됨.

3. 현지 반응

□ 현지 언론, 일제히 재무부 EV 세액공제 세부 규정 발표 소식 조명

- 폴리티코는 이번 세부 규정이 명확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며 각 이해관계자 주체별 세액공제 규정의 영향 예상 조명
 - 자동차 제조업체(마지못한 승리(A GRUDGING WIN))
 - 제조업체가 법안의 시행에 대비하고 차량 판매를 준비할 기간이 재무부 시행 규정 발표 지연으로 당초 입법 시점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었으나 IRA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판매 차량은 없을 것
 - 소비자(부분적인 승리(A PARTIAL WIN))
 - 현재는 제한된 EV 차량에만 보조금 혜택 적용, 월간 갱신되는 적용 차량 목록 주시 필요
 - 기후의제(혼합(MIXED))
 - 화석연료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채굴 산업은 또 다른 환경오염 요인
 - 미국 광물 업계(혼합(MIXED))
 - 청정에너지 공급망 촉진 및 산업 육성 정책으로 수혜를 보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동맹국 및 더 많은 우호국과 무역 거래를 체결함에 따라 추가적인 외국 기업과 경쟁 불가피
 - 유럽(궁극적 승리(WIN EVENTUALLY))
 -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EV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

□ 일본과의 신규 무역협정 체결과 수혜 대상 포함 소식 조명

- 재무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의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FTA라는 용어가 새로 협상된 중요 광물 협정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일본을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무역 파트너로 포함
 - 인사이드트레이드는 재무부가 FTA의 의미를 폭 넓게 준용하고 있다며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 중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으로 포함 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언급

-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일본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의회 양원에서 모두 강하게 반발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강한 비판
 -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역시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의제를 급히 추진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외국에 나눠주고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지적
 - 애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분과장은 이번 발표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또 다른 예시라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위헌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써서 행정부의 일권행위를 저지할 것이라며 규탄
 -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은 “미국이 일본 및 EU와의 IRA 관련 협정에서 얻는 것이 없다” 지적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이준성
▪ 자료원	美 재무부(3.31), 폴리티코(3.31), 인사이드트레이드(3.28)(3.31) 등

□ (무역규제) 미 무역대표부(USTR), 2023 무역장벽보고서(NTE) 공개

- (개요) USTR, 2023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Report on Trade Barriers) 공개(3.31)
 - 동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수출, 해외직접투자, 전자상거래 관련 '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담고 있음
 - * 1974년 통상법(181조)에 의해 매년 3월 31일까지 발간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연례보고서에서 노동자 인권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통상·무역 어젠다 관련 당면 과제 등을 분석했다고 밝힘
- (상세) 미 수출의 대부분(상품 수출 99%, 서비스 수출 66%)을 차지하는 64개 국가의 무역장벽에 대해 분석
 - 국가별 수입 정책, 기술 장벽 등 13가지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 * (1) 수입 정책, (2) 기술장벽, (3) 위생검역, (4) 정부조달, (5) 지적권 보호, (6) 서비스 규제, (7)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8) 투자 규제, (9) 수출 보조금, (10) 경쟁, (11) 국영기업, (12) 노동, (13) 환경
 - 주요 무역장벽으로 (1) 생산업체 등록관리 및 과학적 근거 없는 검역, (2)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3) 중국의 반시장적 국가주도 산업 정책, (4) 신장 위구르, 방글라데시 등의 노동인권 미준수 등을 꼽음
 - 한국 관련, FTA 이행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무역장벽으로는 예년과 유사하게 화학 4법*, 클라우드 보안 보증 프로그램(CSAP), 망 사용료 부과 등을 꼽음
 -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 산업안전보건법, (3)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4) 화학물질관리법
- (비고) USTR은 2023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예정(4.30)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 USTR([3.31](#))

□ [강제노동] 상원, 자동차 공급망 內 위구르 강제노동 조사 확대

- (개요) 상원 금융위, 자동차 부품 기업까지 강제노동 연루 조사 확대(3.28)
 - 금융위는 신장-위구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자동차 부품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기존 메이저 제조사뿐만 아니라, 1차 벤더 (Tier 1)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대상 기업에 4.11까지 답변 요구

○ 세부 내용

(1) 기존 완성차 제조사 대상 추가 자료 요청

- 작년 12.23. 와이든 위원장은 8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 서한을 통해 위구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소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 포드, 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 3.28. 자 서한을 통해 추가 정보* 제출 요구
 - * △해외 협력사 리스트(외국어 기업명)를 관리하는지 여부, △위구르 강제노동과 연관성 파악을 위한 외국어 서류 검토 여부, △중국에 소재한 1차 벤더 리스트

(2)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상 자료 요청(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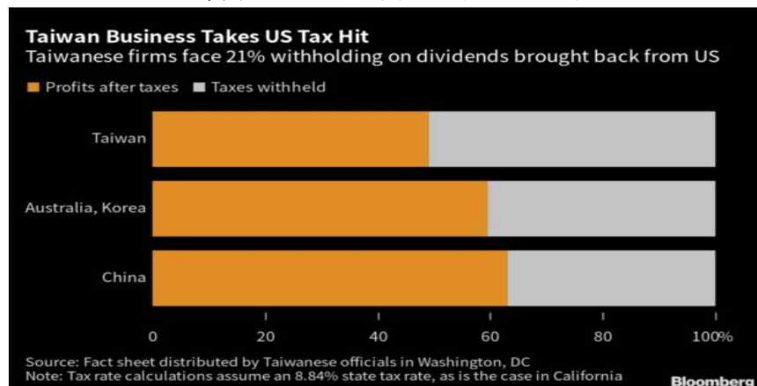
- 금융위는 자동차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부품 기업으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 5개 자동차 부품 기업*을 상대로 다음 문항에 대한 답변 요구
 - * Continental AG, DENSO Corporation, Magna International Inc., Robert Bosch GmbH, ZF Friedrichshafen AG
- △공급망 맵핑을 통한 신장지역 연계성 분석 여부, △신장-위구르 자치 정부의 강제노동 프로그램 연계성 여부, △2차 벤더 공급망 확인 여부, △해당 혐의에 따른 미국 세관 적발 사례 등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상원 금융위(3.28), InsideTrade(3.29)

□ (반도체) TSMC, 대미 투자 최대 걸림돌은 이중과세

- (개요) 美-대만 이중과세 방지 조약 부재로 대만 반도체 투자에 불이익 예상
 - 블룸버그통신(3.29.자)은 바이든 정부가 TSMC 등 대만 기업의 미국 투자에서 발생할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고심 중이라고 보도
 - (상세) 미국 정부는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나,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엘런 재무장관은 “美-대만 간 조약 부재가 대만 기업의 미국 투자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인정하며, 국무부와 해법 모색 중이라고 밝힘.
 - 대만 정부 관계자는 대만 투자 기업이 올릴 미국 내 수익에 약 51%을 실효세율로 전망, 이는 한국 기업보다 최소 10% 높은 수준
- * 본국으로 송금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까지 고려했을 경우

< 대만 기업의 미국 법인세 실효세율 전망 >



[자료] 블룸버그통신

- (전망) 미국 의회 입법으로 해결 가능하나, 미중 관계 악화 우려에 고심
 - 미국 정부가 대만을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Treaty)을 맺기 위해서 입법부의 입법 절차 필수
 -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 온 미국 정부는 대만과 조약 체결이 불리울 대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블룸버그통신(3.29)

□ [전기차] 바이든 정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발표

- (개요)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공공 및 민간 투자 팩트시트 발간(3.30)
 - 민간 투자를 통해 전기차 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소, 기타 인프라, 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상세) 국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4가지 민간 투자 계획 제시

< 저렴한 전기차 보급을 위한 투자 계획 >

(New Private and Public Sector Investments for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계획	내용
1. '전기차 보급 확대' (Fleet Expansion)	△ '퍼스트 스튜던트'(First Student)는 2035년까지 3만 대의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전환 약속 △ '웨이모'(Waymo)는 진행 중인 자율 주행 기술 연구에 전기차 플랫폼 이식 약속 △ '아마존'(Amazon)은 2030년까지 현존하는 배달 차량의 10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 약속
2. '지역사회 보조' (Community Charging)	△ '지멘스'(Siemens)는 신규 건설 주차장 면적의 10%를 전기차 충전소로 배정할 계획 △ 캘리포니아 소재 전기차 충전 연구소(CALSTART)는 서비스 낙후 지역의 충전 인프라 접근 확대 계획
3. '소비자 지원' (Consumer Education and Support)	△ '헤르츠'(Hertz)는 2030년까지 전기 렌트카 확대 약속 △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는 전기차 판매 캠페인 확대 및 시승 행사 약속
4. '자원 마련' (Tools and Resources)	△ 첨단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비영리 단체와 함께 전기차 세금 공제 범위, 구매 비용 절감 등에 관한 연구 약속

자료 : 백악관 팩트시트

- | | |
|-------|----------------|
|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인덕 |
| ■ 자료원 | 백악관 팩트시트(3.30) |

□ IPEF 피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연내 협상 마무리 전망

- (개요) 피지 통상장관, IPEF 협상 11월까지 타결될 것으로 전망 (3.27)
 - 마노아 카미카미카(Manoa Kamikamica) 피지 통상장관은 IPEF 관련 연설에서 향후 6차례의 추가 협상 라운드를 거쳐 올해 11월에 최종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 이어 14개 참여국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차 공식 협상을 통해 IPEF의 네 가지 '필라'(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 경제, ④반부패) 중 최소 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배경) 모든 참여국은 IPEF 의제를 두고 작년부터 협상 진행 중
 - 미국을 포함한 14개 IPEF 참여국은 작년 12월 브리즈번에서 첫 공식 제1차 협상 라운드에서 네 가지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 이후 2월 인도에서 무역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협상을 진행
 - 이후 美 무역 대표부(USTR)는 3월 초 발리에서 열린 제2차 공식 협상에서 모든 참여국이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및 기술 지원 등 무역 의제 협상에 전진을 이루었다는 성명 발표 (3.19)
- (반응) 언론은 IPEF 통상 협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 한 소식통은 美 IPEF 협상단이 5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장관급 회의 이전까지 공급망 '필라'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낙관적 전망
 - USTR은 5월 디트로이트에서 예정된 APEC 장관급 회의 이전 싱가포르에서 제3차 IPEF 공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피지 통상 장관 발언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음.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인덕
▪ 자료원	인사이드트레이드(3.29), USTR 보도자료(3.19)

□ [의회동행] 하원, 해양 운송 개혁 이행법(OSRIA) 발의

- (개요) 해양 운송 개혁법(OSRA) 발의자*인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OSRA 강화를 위한 추가 이행법 발의(3.28)

* Dusty Johnson(R-SD), John Garamendi(D-CA)

- 해양 운송 개혁법은 운송 비용 증가와 화물 적재 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해사위원회(FMC)에 규칙 제정·집행 권한 부여(22.6)

* FMC는 현재 선박 수용, 억류 및 정박료 청구 관행, 부당한 차별 방지 규칙 제정 중 선박 수용에 대한 규칙만 제정

- (상세) 비시장 경제국으로부터 미국 항구, 화주, 제조업체 보호

- 미국 항구 내 중국 LOGINK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비시장 경제국 통제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통제 운송업체' 정의 성문화
- 해운 거래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FMC 공식 절차 수립
- * FMC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규정·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보고된 불만 사항을 사례별로 판단할 것으로 언급
- 국제 해운 시스템과 관련된 자문을 FMC에 제공할 국가항만자문 위원회(National Seaport Advisory Committee) 설립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	------------

■ 자료원	존슨 의원실 보도자료(3.28), 인사이드트레이드(3.29) 등
-------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China Opens Cybersecurity Probe of Micron (중국, 마이크론 대상 사이버 보안 조사 착수)</p> <p>중국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긴장시킬 것으로 전망. 발표 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3% 하락.</p>
The Washington Post	<p>New list of EVs eligible for tax credits to be released next month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목록, “다음달 공개 예정”)</p> <p>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제조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대상 차량은 지금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측. 정부 사이트에서 공개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임.</p>
New York Times	<p>How a Trump-Era Rollback Mattered for Silicon Valley Bank’s Demise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실리콘밸리 은행 몰락 간의 상관관계)</p> <p>2018년, 중소기업 대상 감독 완화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는 없던 일로 되었고, 2021년,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p>
CNN	<p>Belarus says it will defend itself with nuclear weapons if West invades through Poland (벨라루스, 방위를 위해 핵무기 사용 가능하다 밝혀)</p> <p>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환영. 아울러 과거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했던 곳의 준비를 지시. 젤렌스키, 핵배치에 러-중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p>
USA Today	<p>Can Trump still run for president if indicted? (트럼프, 기소된 상황에서도 대선에 나설 수 있나?)</p> <p>2024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기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추측이 난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화당 유력주자들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이라 비판</p>

* 미국 동부시간 3월 31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US23-10	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3월
US23-09	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2023.03월
US23-08	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	2023.03월
US23-07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2023.03월
US23-06	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	2023.03월
US23-05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4	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2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헤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9 (2023.3.15)		
코인시-8 (2023.2.22)		